

청해부대 파병 카드 꺼낸 文... 한미동맹·방위비 다중포석

이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
분담금, 한자릿수 증가율 조율 중
부대 작전지역 확대 통한 지원결정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향상을 위해 '청해부대(대한민국 해군 파병부대)'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독자파병' 카드를 선택하자 한미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중포석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텐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각각 밝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는 게 아닌 독자파병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이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아라비아 만을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은 이 해협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지역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현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을 강조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다가올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기다. 그래서 선거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자파병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꺼냈다. 그중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 요청에 부응해 '독자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가. 복수의 정부 및 여러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독자파병 카드는 원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향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파병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구매조달' 제품에 우리 군인 맡기나



문명철 기자
국방 칼럼

최근 한 언론에서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 해군에 납품된 방편고글(보호 안경)이 기준강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깨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까지 최근 특전사 보급품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 최강 특전사의 보급품이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뛰어 들 수 있는 '구매조달'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전문 국내기업이 있음에도 울타리 제조사가 방편고글, 1인 디자인 회사는 방탄헬멧, 통신가설회사는 방탄복, 피부미용업체는 특수전갑을 각각 특전사에 납품했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법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무결점임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대신, 국민을 위해 당장이라도 죽음의 골짜기에 뛰어 들 군인들은 가짜를 들고 가야한다.

구매 조달로 특전사에 납품된 제품들은 정품이나 더 좋은 성능과 신

뢰도 등이 중요하게 아니다. 특정업체가 독점하면 안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할 각기로 군에 싸게 넣어주면 그만이다. 올림픽의 슬로건처럼 '더 많이 아부나', '더 싸게 후려쳐', '더 빨리 납기를'이 군납품 경쟁올림픽의 숨은 메세지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인을 우대한다는 군납사업(전력지원물자)이라지만, 제조를 통한 품질향상이나 최적의 유통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계약법'과 '관련 절차'만 연구하면 된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품 연구보다 법령이랑 절차연구하는 쪽이 군납이 된다. 민수시장이나 전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한 걸까, '쉽게 풀이쓴 군납', '성공하는 군납'과 같은 제목의 책들이 서점가에서 팔린다고 한다. 심지어 공직자인 한 저자는 "군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다.

/captinm

대학 졸업때까지 주는 장학금 나온다

교육부-기재부 복권위-장학재단 협약
올 2500명 선발... 보전성 기금 3500억
저소득층 중고생에 매달 25~45만원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중·고생부터 대학단계까지 주는 장학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한국장학재단과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 협약에는 기획재정부 복권

위원회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출연금은 올해부터 2022년~2023년까지 4년간 연간 875억 원씩 투입되고, 출연금 이자 수익과 추가 사업비가 장학금으로 쓰인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기존 장학사업과 달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고생(고2~고3) 중 선발해 중·고생부터 대학 단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장학제

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1500명이 선발됐고, 올해는 1000명 추가돼 올해 250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중학생 때는 월 25만원, 고등학생 때 월 35만원, 대학생 때 월 45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학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아울러 1대1 멘토링과 진로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한용수 기자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현지 졸업식

/아주자동차대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취업자, 현지서 졸업식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 이수

아주자동차대가 뉴질랜드 현지 취업자가 이어짐에 따라 3년째 현지에서 졸업식을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2일 아주자동차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 일행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 정비 분야와 요트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는 뉴질랜드에서 해외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 회사에 취업한 졸업생 이한준, 김상현 씨와 대학을 졸업하고 뉴질랜드에 취업해 영주권 취득을 앞둔 선배 3명도 함께 참

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동문회도 함께 열렸다.

자동차디자인전공 졸업생 이한준 씨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해외 취업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지도교수님 권유로 1학년 겨울방학에 뉴질랜드 현장실습을 경험해본 덕분에 해외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생겨 2학년 여름방학부터 뉴질랜드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취업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요트제작 분야 전문 기술인이 되어 뉴질랜드와 한국을 오가며 요트제작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동부 연합기숙사 건립

한국체육대학교에 인근 사립대 학생들도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가 건립된다.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서울 동부권 대학 재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 부지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키로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 2021년 착공, 2022년 완공, 2023년 3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

인천재능대학교는 21일 2019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2008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감수하는 대신,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것이다.

/한용수 기자

“모의선거 교육 추진... 학내 선거과열 제한해야”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실시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40개 초·중·고에서 시행을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지 논란에 휩싸였다.

모의선거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참정권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선거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만18세가 되는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모의선거 교육이 합법한지가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포함된 모의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은 유권자가 아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가능해 선관위 최종 결론에 따라 학생 유권자를 제외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유권자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등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